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 MOU」는 한·미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정부가 가서명한 것임

〈보도 주요 내용〉

11.5(화) 경향신문은 「정부, 미 대선 앞두고 알맹이도 없는 “한·미 원전 수출 원칙 MOU 가서명” 발표... 왜?」를 통해 동 MOU는 “미 대선을 앞두고 부랴부랴 받아낸 립서비스 수준의 MOU”라고 보도했습니다.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한·미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수출통제 이슈를 포함한 미래 지향적 원전 협력을 논의해왔고, 금번에 MOU 가서명이라는 성과를 거뒀음.

특히 동 MOU로 양국 정부는 원자력 수출통제 분야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미래 분쟁 예방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양국 기업간 분쟁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부간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양국 정부의 협력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임.

이러한 성과를 립서비스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동 MOU가 최종 서명되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간 원전 수출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담당 부서	원전산업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태우	(044-203-5330)
	원전수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조아라	(044-203-5332)